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6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필요”

1. 체육 100주년, 스스로 미래의 길을 묻다.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해야...
3.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체육회 등에 제도개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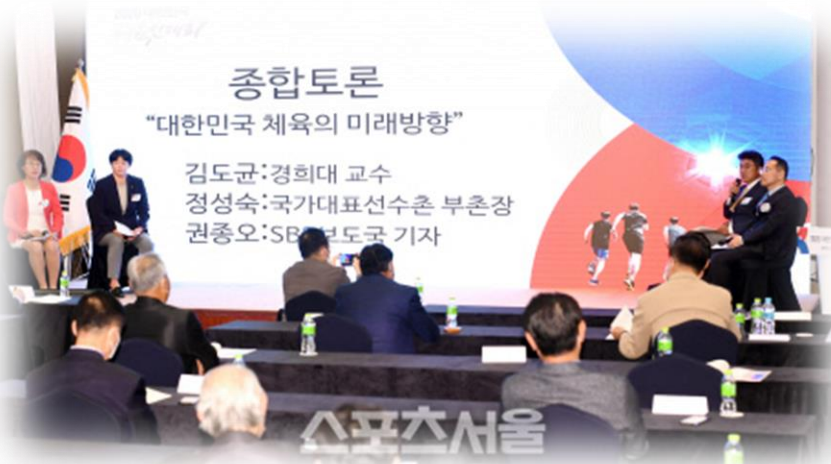
선수들의 ‘인권 사각지대’

생계 어려워 대출 받은 경륜 선수들 징계...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침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공개까지
전용기 의원 “공단, 선수에게만 책임전가...선수 보호 방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체육계 권력형 비위

강진군체육회장, 군청 공무원 흥기로 폭행에 이어 반성문 작성 강요
노조 “분노 금할 수 없어...고발조치 및 상급기관에 항의 방문 예정”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체육 100주년, 스스로 미래의 길을 묻다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6일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룸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스포츠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2020 대한민국 체육인대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출발점에서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국내 체육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고, 체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나선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체육이 위기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했다.

대한체육회는 일제시대였던 1920년 조선체육회로 출범한 이후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10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성적은 물론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세계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에서 6번째 나라가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뚜렷하다. 여전히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만연하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6년 3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를 토대를 마련했으나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성숙 대한체육회 부총장은 “스포츠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인의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선진국처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개념을 도입해 또다른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에는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존엄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방향’이라는 주제 토론에 나선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그간 ‘추월의 길’을 걸어왔다. 계속 따라가고 빨리 가야 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초월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문성은 대한농구협회 사무처장은 “체육은 전 종목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위기 상황인 것도 맞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성하고 또 변모해야 한다. 100년을 거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한국 체육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매년 꾸준히 감소, 열악한 처우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대한체육회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생겼다. 이들은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행 예산의 80%를 교육청이, 20%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분담하고 있다.

2014년 2911명이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15년에 들어 2408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16년 2098명, 2017년 2020명,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99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이상헌 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매년 줄고 있는 원인은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개선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okmc4390@kukinews.com



‘인권 사각지대’ 놓인 학교 밖 학생선수들

“코치님께서 나무배트 손잡이로 허벅지 안쪽 부분을 때려서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우셨습니다.” “숙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들고, 쉬고 싶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운동부인데 맞았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코치 쌤한테 들릴 수도 있고…”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

무한경쟁에 몰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놨다. 지난해 체육계 ‘미투’가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특히 학생선수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제기됐는데도 여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조사와 학생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16개의 정책권고를 했다.

19일 인권위는 학생선수를 관리하는 법률이 2개로 이원화돼 있는 점을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선수관리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전체적인 선수보호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학생선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는데 성인선수와 아동인 학생선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동이 전문체육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를 위한 보호조치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진흥법에선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가 학습권 박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놓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은 이런 제도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학교 내에 해당 운동부가 있어서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에 대해선 비교적 인권보호체계가 잡혀 있는 반면에 학교 내에 운동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운동활동을 하는 학생선수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 밖에서 개인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인권위 전수조사 때 응답한 5만7557명 중 약 14.7%(8436명)였다.

다음장 계속

인권위의 전수조사 결과 개인 활동 학생선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신체폭력 피해 비율의 경우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는 13.8%, 개인 활동 학생선수는 19.7%이었다. 수업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충수업을 통해 학습권을 보호받은 비율도 개인 활동 학생선수(42.2%)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63.4%)보다 낮았다.

개인적으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상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개인지도자는 관리감독주체나 자격요건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또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인권위는 "현행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선수의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취약하다"며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외에도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에게 강요되는 무한경쟁 시스템도 인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봤다. 경기실적이 학생선수의 진학뿐 아니라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수업에 결석하거나 무리한 장시간 훈련 등의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체육특기자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goh@naeil.com



생계 어려워 대출 받은 경륜 선수들 징계...체육공단에 무슨 일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활고로 자신들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륜선수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일거리를 잃은 경륜선수들은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국경륜선수협회는 이달 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총괄본부 경륜선수지원팀 소속 A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선수협이 공단 직원을 고발한 것은 공단이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일부 선수들의 연금보험 담보대출 내역과 납부현황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체 선수에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그간 경륜선수들의 복지 차원에서 선수로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경륜선수들에게 일괄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왔다.

사건은 코로나19 사태로 경륜 경기가 전면 중단돼 경륜선수들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경륜 선수활동이 사회경력의 전부인 선수들은 택배, 배달 등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고,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선수들은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기 일쑤였다. 이에 일부 선수들은 연금보험을 통한 보험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했고, 보험사의 적격 판정에 따라 대출금으로 생활고를 해결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행위가 공단의 내규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단은 지난 7월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륜선수 전체에게 '경륜선수 연금보험제도 운영지침 위반내용 및 조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단은 경륜선수 중 44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융자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연금보험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제4항을 어겼으며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 4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증권번호, 보험계약일자와 최종납입회수, 약관대출금액, 중도인출금액, 인출회수 등을 어떠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공문에 첨부했다.

그러나 보험가입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선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장 계속

연금보험을 신청하도록 한 신청서 겸 서약서에 '경륜선수연금보험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아래 사항에 동의하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고지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서의 '아래 사항은 △선수 등록기간 중 임의 중도해지 금지 및 지급정지 △보험료 납입사항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 △연금상품 선택(한화생명 1종) 란이 전부다.

이로 인해 경륜 선수들은 공단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제16조 제4항은 물론 운영지침의 내용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보험에 가입해왔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단은 보험료 납입사항이 아닌, 담보대출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선수들에게 담보대출 경위 사실확인조서 제출을 강제했고, 선수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운영지침을 근거로 보험금 납부 중지 징계를 결정했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 해지마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이번 대출로 인해 보험금 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보험 유지의 실익이 없는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사비로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공단의 행위는 위법성이 짙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공단의 임의적 개인정보 공개 행위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증권번호, 계약자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다수의 수신인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공단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도 "보험약관과 공단의 운영지침에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공단에게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인권 침해의 부분이 있고 공단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단은 자신들이 보험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점은 무시한 채 이번 대출 사건을 선수들의 책임으로만 돌린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의 생계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ndlove@cbs.co.kr



서울신문
최지봉 기자 2020.10.23

전남 강진체육회장 군청공무원 감금·폭행 물의

전남 강진군체육회장이 강진군청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고발키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강진군체육회장 A(57)씨가 지난 21일 오후 4~5시쯤 1시간 가량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체육회 사무실로 불러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지역 아마추어 축구대회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체육회장인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협하다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정강이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가 머리와 정강이 등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된 것들을 자필로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과 반성문 작성 강요는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포츠산업단장인 B씨가 그동안 체육회장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진군은 “모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강진체육회장이 군청 공무원을 흉기 폭행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군체육회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을 체육회 사무실로 불러 발로차고 흉기 손잡이로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힌데 이어 1시간이 넘도록 사무실에 감금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체육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의 합당한 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조만간 A씨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상급기관인 전남도체육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재명 노조 지부장은 “B씨가 당시 체육회장의 강요에 못이겨 작성한 자술서 내용을 보니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고 글씨체도 엉망이었다”며 “B씨가 감금과 협박 속에서 자술서를 썼고,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cbchoi@seoul.co.kr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